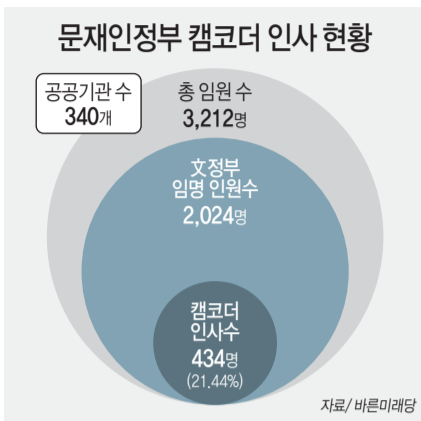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임원 선임 문제제기

# 해외 공관장 절반 '캠코더'... 공기관장 선임 정치 논리로

〈대선캠프·코드인사·더민주 출신〉

현행 선임제, 실제 운영과 괴리 커  
효율적 경영·공정 성과평가 어려워  
선정부부터 임명까지 전반적 개선 필요



‘코드인사(측근내정)’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선임 기준을 기관별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국회도 공공기관 코드인사 근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339개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은 4000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임원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물색·심사해 적합 후보자 3~5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임명하

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는 실제 운영과 괴리가 크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과 공정한 성과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자원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라 임원 추천 기준의 구체성·명확성도 부족하다는 고언도 나

온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일본 경제보복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달 조사·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에 따르면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15명이 외교 경험·전문성이 없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다.

부동산 분야에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주정심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지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해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공정성·전문성 등을 저하한다고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재

환재경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분석을 통해 “(추천위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선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추천위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 결정권이 강하고, 민간위원 선정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조사관은 또 “추천위에 인사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공공인사선임 원칙을 기준으로 임원을 엄선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공공부문을 분류·규정하고 ‘간접 임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원 선임과정의 법령·규정을 마련해 다양한 기관의 견제와 동의를 얻도록 한다. 특히 공공기관 인사감독 기관

인 공공인사감독관실(OPCA)를 두고 임원 인사를 규제한다. 또 ▲주무부처 책임 ▲이타성 ▲신뢰성 ▲후보자 가치 ▲개방성 ▲다양성 ▲확실성 ▲공정성 등 8대 원칙을 두고 임원선임과정에서의 민원 접수와 조사, 감사 등을 실시한다.

입법처는 한국 공공기관의 임원선임제도 개선을 위해 ▲임원 선임기준 명확화 ▲추천위 독립성·전문성 강화 ▲임원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임원 임기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형식적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과 공개 경쟁 등의 선임 방식을 취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임원 후보자의 선정부부터 검증, 임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학생들과 함께 ‘셀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광주 교육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참관한 뒤 교육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삼성전자

## 효성, 기술자립 선언... 탄소섬유 1兆 투자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개최  
2028년까지 생산라인 12배 확대

효성이 탄소섬유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효성은 20일 효성첨단소재(주) 전주 탄소섬유 공장에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열었다.

효성은 2028년까지 탄소섬유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2000t(톤) 규모였던 생산라인을 12배인 2만4000톤까지 확대한다.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현재 1차 증설을 진행 중이며, 2020년 1월부터 2000톤 규모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하고 2월부터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효성은 2028년 증설 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 톱3위로 올라설 것



조현준 효성 회장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탄소섬유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도 2300개 이상 창출할 예정이다.

앞서 효성은 2011년 국내 최초로 독자기술을 바탕으로한 ‘탄섬’을 개발해 2013년부터 생산중이다. 일본과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다.

탄소섬유는 수소자동차 수소연료탱크 핵심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다. 2030년까지 시장이 12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탄소섬유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독자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탄소섬유 후방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수소경제로 탄소섬유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만큼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며 “또 다른 소재 사업의 씨앗을 심기 위해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성장이인 찾기 힘들어... 누적 자본 투자돼야”

>> 1면 ‘저평가 늪에 빠진...’서 계속

### ◆실적 2배 늘어도 주가는 ‘짚뭉’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시총 상위 100개사(삼성전자 우선주 포함) 시총은 총 947조7054억원, 영업이익은 801조5927억원이었다. 이후 지난해 시총 100개사 시총의 합은 1087조4484억원, 영업이익은 1115조5223억원이었다. 9년간 영업이익은 39.2% 늘었지만, 시총은 14.7%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특히 2017년 시총 상위 100개사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2.4% 이상 늘었지만, 시총은 25.9%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2018년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났지만 실적 개선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시총은 19.5%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라는 지적이다.

김형철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를 밑돌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영역에 있다”면서 “저 PBR 환경에서도 투자자가 주가를 싸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장부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증시는 규모의 경제한계를 드러내는 전통제조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 성장요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조산업의 누적된 자본이 플랫폼 경제의 성장 아이টে에 투자되어야 선순환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상위 100개 기업(올 1분기 말 기준) 중 최근 3개년의 부채비율 추산이 가능한 93개 종목을 선별한 결과 지난 2017년 1분기 평균 212.33%였던 부채비율이 올 1분기 181.59%로 줄어 들었다. 해당 기간 현금성 자산은 평균 713억원에서 773억원으로 8.4% 늘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文대통령 “하림,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모범”

>> 1면 ‘탄소섬유 국가...’서 계속

### 익산 분사 방문... 임직원 격려

2024년까지 8800억 투자

일자리 2000개 창출 비전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다. 오늘 탄소섬유 신규투자가 우리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투자협약식 후 효성첨단소재 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고, 탄소섬유 공

정 및 수소저장용기 생산과정 등을 시찰했다.

전주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발길을 돌려 오후 4시쯤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를 찾았다. 하림이 농식품산업 지역 발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88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0명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하림 본사를 찾아 “하림은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것과 달리 그간 발전의 토대가 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성장의 과실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격려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도 지역,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림의 투자 계획 보고를 들은 후 닭고기 가공공

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식품산업의 혁신이 우리 농축산업 혁신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식품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축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와 가축 방역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전북행과 관련 “탄소섬유 및 식품산업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해당 기업들도 생산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